

전후세대의 역사의식

—역사학과 역사교육을 통해서 본—

이민호*

<목 차>	
I. 역사의식	III. 서양사와 사회사적 시각
II. 한국사연구에 나타난 민족 의식	IV. 역사교육에 반영된 역사의식
	V. 결론

I. 역사의식

역사 속에 사는 인간은 현재라는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면서 삶을 영위한다. 따라서 현재에 대한 관점은 불가피하게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새로이 조직하여 앞으로의 삶을 전망하게 한다. 그 이유는 인간과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제도와 공동생활의 형태가 시간 속에서 그 과거와 미래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현상도 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란 없으며, 반드시 어떤 전제를 갖고 시간 속에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의식이란 역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관심과는 달리 과거의 의미를 오늘에 와서 해명하면서 현재를 이해하는 동시에 장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도록 하는, 이른바 인식의 현재화 내지는 인식의 전체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Jeismann : 42).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의식의 형태, 내용, 성찰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세대에 따라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그들이 겪는 과거의 경험, 현재의식, 장래전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역사의식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지향적인 역사의식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식은 개인의 의식으로 환원되어 분산되고 원자화된 것일

* 서울大 人文大, 西洋史學

수 없고 어떤 모양으로나 그 형태가 집단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가진 개개의 경험지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광범위한 집단적 기억에 의존하여 역사의식은 형성되는 것이다. 한 집단의 일체성 내지는 정통성의 요구가 역사를 매개로 하여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가로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합의하는 것 보다 보다 더 큰 인격성으로 인간집단을 파악할 때 *歷史的個體性(historical individuality)*이라는 개념이 성립된다. 한 집단은 밖으로는 통일성과 공통성을 내세우고 안으로는 일체성과 공속감을 다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집단의 일체성이나 정통성의 요구가 역사의식을 매개로 하여 성립된 역사적 단계는 곧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Jeismann: 43). 더우기 전통적 제요인을 극복하고 주민을 정치생활에 참여시키는 과정은 국가에 의한 국민교육제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되기에 이른다.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적 통합기능에서 역사교육의 역할이 강조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근대 역사학이 또한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과 그 시기를 같이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국민국가의 정치적 통합과정이 역사적 전통을 매개할 때 근대 역사학의 기능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근대 역사학은 실증적 과학성을 토대로 하여 주관성을 거부하여 객관성을 추구하려고 하여 그 학문적 출발을 약속받았다고 할 수 있다. 객관성의 요구에 의해서 역사학은 지나친 이데올로기의 종속을 끊임없이 경계하게 된다. 그러나 역사학은 엄밀한 사료비판의 정신에 입각하여 작업하지만 사실과 사실을 관련짓는 이론, 즉 역사적 사실을 일정한 역사적 발전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관 내지는 역사의식의 문제에 또한 맞서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역사학은 학문외적 상황과 학문내적 방법론이라는 이중적 구조 속에서 그 기능을 다한다(Rüsen, 1975: 68).

우리가 굳이 역사를 보는 관점을 역사관이 아니라 역사의식으로 문제삼는 까닭은 관조하는 정신을 갖고 *Theoria*의 세계를 창출하는 탁월한 개인의 관점에 의거하기 보다는 집단의 관점이나 의식에 의거해서 한시대의 역사적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본론에서는 광복후 우리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발전 속에서 역

사학이 어떤 관점, 즉 어떤 집단적인 역사의식에서 연구되고 그러한 연구 결과가 어떻게 역사교육에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피교육자가 어떤 역사의식을 갖게 되었는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광복후 우리 나라의 역사학은 국사학을 중심으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였던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우리 역사를 우리의 시각에서 평가하려는 민족사학의 과제를 추구하려는 고뇌에 찬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반면, 역사교육은 관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역사학계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순화된 역사의식을 젊은 세대에게 마련하도록 하는 데는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1945년부터 오늘날까지 국가에 의해서 제정된 교육과정은 교육의 장인 각급 학교에서 참여 비판하는 풍토에서 제정되고 변천된 것이 아니라 관에 의한 일방적 강요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후 세대의 역사의식을 조감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관을 토대로 한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이 정치적 통합 요구로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적합·상충되었는가를 밝히면서 그것이 역사교육에 반영된 과정을 살피고 오늘의 젊은 세대의 역사의식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Ⅱ. 한국사 연구에 나타난 민중의식

1945년 우리는 일본에 예속되었던 식민지 질곡에서 해방되어 국권이 회복되었으나 남북으로 분단되는 민족의 비운을 다시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남북이 각각 다른 차원의 민족적 정통성과 일체성을 추구하여 일치된 민족의 통일된 역사적 발전의 내력을 확인하면서 미래를 전망하기가 어렵게 되어 분단국의 역사의식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 우리나라 사상계 일반은 해방후의 좌·우익의 충돌, 6·25 수복 후의 사회적 정치적 불안으로 그 정확한 좌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표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중첩된 난관에 부닥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일본이 남긴 식민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데다 미국문화의 일방적 유입으로 그러한 난관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었던 계기는 1960년

에 일어난 4·19 혁명이었다. 이로써 새로운 시각이 부자되기 시작하여 일제 식민지 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광복후 절제없이 수용하였던 미국문화에 대해 비판하면서 민족사관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비로소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노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광복과 6·25를 거치면서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된 그늘 아래에서 민족적 입장이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타부시되었으나 분단의 의미를 새로이 평가하고 민족의 통일을 새로이 전망하려는 시각이 제시되었다(성유보 1983: 109).

(2) 4·19 혁명을 추진한 역사의 주체에 대한 평가는 광범위하게 민중의 힘을 새로이 인식하도록 되었고 그러한 민중의 힘을 결속하는 민족의식이 강조되었다. 그러므로 4·19에 의해서 드러난 현실적 경험을 학문적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각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예컨대 문학에서 순수문학을 지양하고 현실참여 문학이 주장된 바와 같은 방향이 사상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었다.

(3) 4·19에 뒤이어 5·16 군사정권에 의해서 추진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전후로 하여 산업화의 의지가 방출된 것과 때를 같이 하여 ‘근대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근대화의 논의’는 타율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율적 발전을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시각을 제시하게 되었다.⁽¹⁾ ‘근대화 논의’로서 한국 사회의 근대화 시점을 어디에 들 것인가 또한 한국자본주의의 맹아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은 드디어 시대구분의 문제와 연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학에 반영된 역사의식은 역사운동의 담당자가 누구인가? 타력에 의한 근대화가 아니라 자생적이고 주체적인 근대화 과정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모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한국사의 발전이 세계사적 일환 속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한정된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의 기본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인 역사관의 수정문제까지 그 속에 내포하기에 이르렀다.

1) 먼저 근대화 논의의 효시적인 역할을 한 것은 1962년에 ‘한국의 근대화문제’라는 주제로 열린 제 1회 동양학 심포지움이었다(진단학보 23:191-212).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 동·서양의 근대사회 형성과정에

(1) 특히 근대화논의와 함께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대한 논의를 거쳐 우리 나라의 근대사회 형성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전개시키게 되었다. 여기에서 한 참석자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근대화는 과거 어느 기간처럼 우리가 원하고 아니하고 간에 외세의 침입과 함께 타율적으로 서양적인 근대화가 강요된 경우도 있고 또는 오늘 날의 단계처럼 늦게나마 서양적인 근대화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대화가 서양적인 근대화의 필요를 자각해서 차율적으로 근대화를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서양과 동일한 역사발전의 과정을 밟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서양의 발전을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그에 보조를 맞추면서 제시된 한국사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근대사회의 시점은 열강과 교섭하기 시작하는 개항시기에 설정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는 한국의 근대사회가 일본 자본주의의 일환에 연관됨으로써 비로소 그 출발을 약속받았다는 일본인의 관점을 계승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외세와의 연관 속에서 한국의 근대화가 갖는 특수성은 1963년에 열린 한국사학회 주최의 학술대회 ‘조선후기의 사회적 변동’과 1966년 「신동아」에 실린 ‘한국사의 논쟁점’과 1967~68년에 걸쳐 개최된 한국 경제사학회 주체의 ‘한국사의 시대구분 문제’에서도 피력되었다(사학연구, 1963:91 이후). 여기에서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기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미 근대화를 전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조 후기에 있어서의 사회변동에서는 소작 전호의 자영화에 의한 자영농의 성장이라든가 시장판매를 위한 수공업 경영을 관찰하면서 봉건사회붕괴와 한국 자본주의 맹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사학연구 1963:96-113).

이러한 노력에는 해방전 일본인 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한국사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거부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관변 사학자들이 「개항 당시의 조선에는 자본의 축적도 없고 기업적 정신에 충만한 계급도 없어 자본주의 생산조건과는 정반대의 요소만을 확인하고자 하였던 것」과는 다른 자체발전을 인식하려는 역사의식의 발로로 표시될 수 있다.

이로써 신분제도, 경제, 사상, 종교, 문학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조선

후기에 나타난 근대화의 태동을 추구하려는 획기적인 연구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체의 「근대화」를 확인하려는 역사의식은 이러한 자체 발전을 저해하는 내적 요인과 외세의 침입이라는 이중적 상황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통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과 동시에 진행된 국사학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국면이었다.

1963년 이후 발표된 일련의 논문들에 의해서 한국사의 재구성을 위한 과감한 방법론적 구상이 시도됨과 동시에 일제관학의 한국사에 대한 왜곡을 고발하여 일본학자들이 내세운 한국사의 타율성과 정체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기에 이르렀다(김용섭, 1966:476-495; 홍이섭, 1963:62-68). 논의의 요지는 식민지 시대에 총독부 관리, 군부의 수뇌, 식민지 강단에 투입된 일본인 학자들은 그들의 한국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역사발전을 철저히 왜곡·날조하였다고 고발한다. 한국사의 날조에 동원된 방법과 이론의 주류는 곧 랑케사학의 문헌비판적 방법(김용섭, 1966:478)과 L. Brentano(김영호, 1969:84)의 경제단위 발전론이었다. 「원래 어떻게 있었는가」를 밝히기 위해 자아까지 소멸하고자 한 랑케역사학은 「역사의 객관성」을 방법론의 이상으로 삼고 있음은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랑케의 「객관성」은 그 속에 이미 국가이데올로기가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표방된 「객관성」과 그것이 목표한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이민호, 1976). 따라서 식민지 관변역사가들이 랑케의 실증주의와 객관성을 두기로 하여 작업하게 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단위발전에 의하면 한국에는 봉건제가 결여됨으로써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못보고 한국사회와 경제는 후진성 내지는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속명적으로 일본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서슴치 않고 주장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시작되는 것으로 한국고대사를 파악하여 한국사의 타율성이론을 완성하였다. 일본인에 의한 한국사 연구는 일본의 대륙침략과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경영을 위한 「滿鮮史觀」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타율적인 한국사는 조선총독부에 부설된 「조선사 편수회」와 식민지 교육기관인 경성제대 법문학부에서 연구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한국사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은 완전히 봉쇄되고 일본이 강요한 식민사관은 해방후에도 학문, 사상, 교육에 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즉각

청산하려는 노력이 분단상황에서 곧 실현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강점에 저항하는 의식을 지니고 민족사학의 맥을 형성하였던 민족사관이 새로 운 각광을 받고 있다. (강만길, 1985:195). 박은식의 민족의 혼, 신채호의 낭가사상, 문일평의 조선십 등을 토대로 한 한국사 인식은 시작과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식민지 통치에 대항하는 주체적인 민족사관을 수립하고자 한 노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역사의식은 민족사관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역사발전을 해석한 백남운의 사회경제사학도 민족적 저항을 간직한 역사의식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사학은 한국사의 타율성이나 정체성의 이론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으나 한국사 해석을 위해 세계사적 발전의 보편적 법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지나친 도식주의를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이기백, 1975:7).

한국사 속에서 세계사적 발전을 찾으려는 노력은 분명히 일본인에 의한 한국사의 정체론이나 타율성을 거부하고 그러한 역사관에 저항하는 노력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정을 지나치게 서양사회 발전에 기준하여 해석함으로써 모든 역사가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재단된 것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 관학자들의 한국사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민족사학과 사회경제사학의 맥을 발굴한 국사학계는 실증사학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시대 탕케사학을 수용하면서 문헌비판을 주무기로 삼아 한국사 왜곡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 관학자들이 이용한 중요 무기가 곧 실증주의 사학이었다는 사실은 이미지적된 바 있다(이기백, 1973:12).

해방후 이러한 실증주의 사학이 그대로 받아 들여져 일정한 역사관을 갖는 것을 기피하고 한국사의 개별적인 실증적 연구에만 주력하여 역사적 사실의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있었으나 한국사를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실패하고 사건사적 역사학을 추구하는 데 시종하였던 것이다.

한국사의 정체성과 타율성을 토대로 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자주적 민족사관을 정립하려는 방향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그 차체의 분열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유신체제에 의해서 민족의 주체성의 논의가 강조되고 국적있는 교육을 새로운 통치의 지표로 삼음으로써 민족주의라는 이름아래 복고주의와 국수주의를 토대로 한 반동적 역사해석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3) 이러한 틈바구니에서도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한국사의 주류는 역사운동의 참다운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하여 날카롭게 추구하였다. 역사의 주체를 민중에서 구하려는 역사학의 노력은 70년대에서 시작되어 정치적 상황이 경직된 가운데 80년대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다. 이것이 곧 민중사관으로서 국사학자들은 일제에 저항한 민족사학자들의 노력을 새로이 음미하게 되었다. 일제시대 사대주의 사관을 극복하려는 박은식이나 단재 등은 역사의 주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 특히 단재는 낭·불·양가와 유가의 투쟁을 진보·보수의 투쟁으로 인식함으로써 일본에 저항하는 역사의 주체를 확인하여 민족사학의 토대를 완성하였다(강만길, 1985:198).

1962년부터 흥이섭교수가 ‘단재 신체호’라는 글을 발표한 이래 1981년까지 꾸준히 단재사학에 대한 관심이 피력되었다. 단재사학은 기본적으로 유교가 내포하고 있었던 정신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낭가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전통적 사대사상을 극복하는 동시에 충군사상을 비판하면서 역사의 주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我와 非我’의 대립으로 민족사를 해석한 그는 군국주의나 영웅주의의 지배를 거부하고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고 결대독립 노선에 서서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투철한 민족구성원을 민중의 범주 속에서 찾아내었다. 이렇게 역사의 주체를 민중 속에서 확인하려는 노력은 민세 안재홍이나 남창 손진태 등의 신 민족주의 사관에 계승되어 더욱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었다(이기백, 1972:509). 이들은 단재나 위당의 영향을 받아 역사를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특권지배계층의 역사적 역할이 아니라 일반민중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점 유물사관 논자들과 일치되는 경해도 있었지만 계급투쟁의 요구보다는 민족균등을 그 이상으로 삼았다(김정배, 1979:37). 식민지 치하에 저항한 민족사학자들이 민족의 핵심을 민중으로 삼아 역사의 원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80년대에 더욱 심화되었다. 70년대에 산발적으로 논의되던 민중이라는 개념은 80년대에 이르러 동태적인 개념으로 쓰여져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순에 의한 억압과 수탈에 항거하는 집단 개념으로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민중을 사회적 실재로서 부각시키고 있으나 역사적 연원을 찾으려는 폭넓은 관심은 민중문화, 민중생활, 민중운동, 민중의 사회전기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민중 개념은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층 일반이나 지배계층에 의해서 억눌리고 소외

되는 인간집단 일반으로 해석되어 때로는 지나치게 초역사적 개념이 됨으로서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정창렬, 1982:11).

새로운 민중의논의는 이를 역사적으로 규정하여 열강과의 강화에 의해 한국사회가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되는 시기에 한정시켜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이용되었던 ‘백성’이나 ‘평민’이라는 개념은 자본주의에의 편입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개항을 계기로 근대주의를 표방한 개화사상이나 전통적인 국가관과 사회관을 재구성하려는 척사위정의 운동은 각각 민족정신을 각성하는 데는 이바지하였으나 둘 다 외래 자본주의 세력과 결탁된 지배체제에 대항하는 적절한 이데올로기를 제시할 수 없었다.

이에 비해서 보국안민 사상은 광범위하게 농민전쟁등과 연결되어 인간해방, 전통적 사회질서와 외래 침략세력에 대한 총체적 부정 등 적극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 강점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정창렬, 1982:26).

민중을 주역으로 삼는 민족의식이 다시 형성된 것은 3·1운동이었다. 식민지 한국경제가 일본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예속됨으로서 새로운 사회구성의 편성이 진행되었다. 자산가, 지식인, 청년, 학생, 소시민에 의한 민족운동은 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타협적 매판세력에 대해서 중소자본가층을 중심으로 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민족적 사회주의 내지는 계급적 사회주의 세력을 각각 형성하여 전개되었다. 이리하여 노동자·농민을 근간으로 하여 민족자본가; 지식인, 청년, 학생, 소시민 등이 동맹자로 한 민족세력이 민중으로 부상한다고 평가한다. 민중은 민족해방과 민주주의적 변혁이라는 역사의 담당자로서 이는 결코 객관적 조건의 수동적 被規制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을 소화·극복하면서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자기 창출의 주체라고 확인한다(정창렬, 1982:29~30).

국사학자들이 민중의 존재에 주목하게 된 것은 민중이 역사의 변혁을 추진하는 방대한 에너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 에너르기는 민중에게 所與로서의 객관적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르기는 민중을 내면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인간적 자각과 결단에 먼저 매개되어 분출되는 것이므로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민중 속에서 민족의 강인한 저력과 역사의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현실과 그 역사적 현실을 파악하고자 한 지식인의 역사의식이 매개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사학이 강조하는 민중을 파악하는보다 깊은 사회구조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Ⅲ. 서양사와 사회사적 시각

국사학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서양사학은 과연, 그 자체 어떤 시작을 갖고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을까?

1945년 서양사의 연구는 일본대학에서 서양사를 전공한 몇 사람의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서양에 대한 인식이 이때에 비로소 생겨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서양에 대한 관심은 멀리는 이조 후기 청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입수하거나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한역된 서양서적을 통해서 자극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자학과 결부된 사회체제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려는 사회개혁적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사에 대한 관심은 경사(經史)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비판적 정신과 객관적 인식을 매개로 하여 역사를 보다 사회개혁적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의지와 결부된 것이었다(이민호, 1975).

개항이후에는 각급 학교에서 신식교육 과정이 채택됨과 더불어 서양 내지는 외국지식을 알리기 위한 서양역사, 만국역사가 광범위하게 가르쳐지기 시작하였다. 개화파 사상가들이 서양의 민권사상을 받아들여 이것을 민족정신과 결부시키려는 노력이 이러한 과정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스스로의 눈으로 서양을 확인하려는 우리의 입장이 확립되기 이전에 재빨리 서양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물질문명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완전한 패배를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본은 우리에게 우리의 역사를 정당하게 연구하고 교육할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양사연구나 교육의 기회마저 완전히 봉쇄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중등학교에서 교육되는 서양사라 하더라도 민권투쟁에서 일어지는 민주주의 발전이나 산업화에서 야기되는 갈등 등이 전혀 교수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었다(이민호, 1975).

광복후 새로이 대학이 창설되었고, 일본을 대신하여 서양세력을 표방한

미군이 친주하고 미국문화가 수용됨으로써 서양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할 현실적인 요구가 적극적으로 대두되어 이것이 역사교육에도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후 새로이 창설된 각 대학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시대 식민지체제에 대한 내면화된 저항의식을 갖고 일본의 대학에서 서양사를 전공한 인사들에 의해서 서양사 교육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역사의식은 서양을 직접 접하고 얻어진 역사인식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 서양사학의 체험을 매개로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제1세대의 서양사학 전공자들의 책임은 서양사 강의를 통한 서양사 지식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계동적 역할과 젊은 서양사 전공자를 양성하여야 하는 이중적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들을 뒤이어 일제때 대학을 다니거나 해방후 대학에서 서양사를 전공한 제2세대에 의해서 서양사 연구의 토대는 비로소 마련되고 광범위한 발전의 가능성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양사 연구인원이나 연구업적은 인원과 자료와 예산의 부족 등으로 서양사 지식에 대한 객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까지는 한국사에 비해서 미약한 것이었다.

1969년의 ‘회고와 전망’에서는 서양사학회 초대 회장이었던 조의설 박사의 환력을 기념하는 논총이 발간된 것을 획기적인 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역사학보, 1969).

일제하에서 일부 선각자에 의해서나마 꾸준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국사연구에 비하여 미미하였던 서양사학이 해방과 더불어 소수 학자에 의하여 그 터전을 닦기 시작한지 20여년에 마침내 서양사 연구논문만으로 한권의 논문집을 펴내게 되었다.

이 한마디로 1960년대 후반까지의 우리 서양사학의 부진한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인력이나 여건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서양사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논문이 나타나서 1969년~1972년 사이의 연구업적(역사학보, 1969~1972)은 그리이스, 로마, 중세, 독일, 영국 순으로 양적 연구성과를 드러내고 이것을 주제별로 파악한다면,

- 1) 그리이스 민주주의
- 2)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과 발달
- 3) 독일의 후진 자본주의와 농업구조

- 4) 혁명을 전후한 영국의 사회경제적 변동
- 5) 미국의 독립운동과 서점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정부수립후 4·19까지 우리가 겪었던 민주주의의 시련을 간접적으로 서구의 민주주의 발달과 대비하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연구를 분석한 후 논평은 ‘민주혁명의 시기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많았다’고 한 문맥 가운데 이 시기의 서양사를 전공한 연구자들이 현실사회를 보는 시각과 서양사의 발전을 보는 시각, 즉 그들의 역사의식의 편린을 읽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서유럽의 발전을 ‘이념형’으로 보는 시각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서양사의 경우에는 이미 산업화되고 합리화되고 근대화된 역사를 파악하여 그 역사는 새 것과 낡은 것의 갈등이 극복될 것처럼 처리하는 사고방법’에 둑여 있었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이민호, 1970:129).

그러한 결과 ‘근대화 논의에 입각하여 공업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국면에 처해 있으면서 서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이나 그것이 수반한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서양사 연구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서양사학계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는 위에서 언급한 문맥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4·19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혁명기를 겪고 5·16 군사정권에 의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는 것과 시기를 전후하여 우리의 현실문제와 서유럽의 역사발전의 관계를 비교·검토하려는 시각이 새로이 제기되었다. 「근대화」와 더불어 민족주의의 논의가 전개되나 서구이론의 소개를 넘어서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논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과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대립적인 이론이나 주장들도 적지 않았다. 그 이유는 경직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서유럽 사회발전의 여러 국면을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학문적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점 서양사 회고와 전망 중 총론에서 어느 평자는 ‘연구자가 진공 속에 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사회조건 속에 태어나 그 속에서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와 사회의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나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은 사회에 사는 동료들이 자신이 놓인 위치

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알만한 일, 알아야 할 일을 제시하는 것은 임무인 동시에 보람이라 할 것이다. 역사학자의 사명감이라는 것도 종국적으로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역사학보, 1967)’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5·16 이후의 경직된 정치 상황과 서양사학이 추구해야 할 문제의식의 괴리 속에서 나타난 심각한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서양사학이 당면한 외적 상황의 어려움은 내적 어려움과 겹쳐 있었다. 기본 사료에 입각하지 않은 연구와 영어 문화권에 집중된 연구업적의 편재성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권의 연구조차 2차적 연구, 즉 미국 연구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민족주의’나 ‘근대화’ 등 국사학이 관심을 갖게 되는 이론분야도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직수입 소개된 이론에 국한되었을뿐 다양한 이론전개가 봉쇄되는 형편에 있다.

60년대와 70년대에 널리 소개되었던 민족주의의 논의는 거의 H. Kohn에 의존해 있었던 것이 이 시대의 지적 풍토였던 것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Kohn의 논의는 민족주의를 서방적 내셔널리즘과 동방적 내셔널리즘으로 유형적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으로 서방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주관적―로 정치적인 것인데 대해서 동방적 민족주의를 객관적―문화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주의 논의란 미국식 민주주의 이념을 표준으로 설정된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다. 이러한 유형적 고찰만으로는 민족주의의 역사적 성격이나 그 사회적 기능을 확인하거나 우리의 민족주의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제시한다.

Kohn의 논의는 독일의 정치적 후진성을 반영하여 「문화국민(Kulturnation)과 국가국민(Staatsnation)」을 나누어 설명한 Meinecke의 ‘세계시민 사상과 국민국가’에서의 민족개념을 빌려서 구성한 것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유형적 논의만으로는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한국 민족주의의 문제 가 해석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명백하다(이민호, 1982). 또한 Rostow의 경제성장론으로 이끌어진 근대화 이론은 경제적 지표만을 사회발전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전통사회가 산업에 의해서 쉽게 생산될 수 있고 경제적 종속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도 성숙과 고도소비단계에 들어선다는 낙관론을 제시하여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가 전혀 고려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서양사학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미국 역사학이 60년대 후반까지도 구조기능주의 사회학에 크게 의존하였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태주의나 구조기능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사회과학 일반은 2차대전이 끝난 뒤 세계정치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자체가 후진국 발전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드러내거나 감추어진 형태로 제시하여 미국사회가 갖는 구조적 갈등이나 모순을 주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는 서양사’라는 인식을 내세우면서도 우리나라 서양사학 연구자들이 한국사 연구자들과 격의없는 학문적 대화를 교환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리하여 서양사 연구의 개방성에 준하여 한국사 연구방법의 후진성을 개탄하던가 우리와는 관련없는 서양의 발전이라는 별개의 문제의식에 시종 서양사연구를 거듭하였다(한국사회연구, 1983:29).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의 역사학계가 사회사 이론을 개발하여 이때까지 유럽 사회의 발전을 모든 사회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암묵적으로 승인하던 발전단계설을 거부하고 역사발전의 새로운 변수로서 제3세계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한 시각은 이때까지 내재적 갈등이나 모순을 주목하지 않았던 낙관적 시각을 또한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사회사가 제기하는 문제는 과거 한정된 정치적 지배질서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던 정치사학이나, 들어내거나 감추어진 형태로 생산력의 토대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일방적인 경제사학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국면을 연구, 분석하기에 이르렀다(이광주, 이민호, 1979). 사회사가 추구하는 문제는 국제관계에서의 협력이나 종속, 지배와 피지배, 계급과 계급의식, 사회적 갈등과 저항, 수요와 공급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국면을 문제삼게 되었다. 70년부터 사회사 연구의 방법론이 우리나라에도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사회사적 시각에 의거한 서양사 연구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사 연구의 성과나 방법을 토대로 한다면 서양사와 한국사가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로소 제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사와의 협력을 강조하더라도 서양사학 연구자들의 문제의 시각, 넓게는 그들의 역사의식의 문제는 국사학 연구자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될 수 없는 이중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이론을 받아들여 한국의 제반 역사

적 국면을 해석하는 데 대한 반성은 불가피하게 이중적 구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와래 이론의 보다 적극적인 수용을 강조하는 입장과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학문토대를 구축하려는 입장으로 구분되는 한국 사회학의 문제의식과 같은 문제의식을(김진균, 1983:87), 우리나라 서양사학은 제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서양사 연구의 대상은 서양사회이며, 다만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인식하려는 관점이 제시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학이 제시하는 이론바 ‘객관성’의 요구와 분단과 통일을 내세우는 실천성의 대비가 역사학에서 논의될 수 있고 그것은 역사내적 ‘객관성’과 역사인식의 상황이라는 역사외적 조건으로 대비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의 논리를 연장시킨 선상에서 유럽인이 유럽사를 보는 시각과 우리가 유럽사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역사의식의 구조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겠다.

서양사에 의한 사회사 이론은 소개는 국사학에서의 사회사 연구에 큰 자극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사 연구 자체 내에서도 산업화에 의해서 제기된 사회적 갈등이나 노동계급, 사회주의의 성격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을 이전과는 달리 활성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서양사학에서 추구하는 사회사 방법론에 대한 논의나 구체적인 사회사 연구가 국내학계와의 친밀화, 간접적, 학문적 교섭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교섭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한국사 연구의 국수주의적 경향에 대한 서양사측의 경계 내지는 비판에서 비롯된다(차하순, 1972).

그러한 경계 내지는 비판의 근거는 유신체제 하에서의 국가의 교육정책 내지는 문화정책의 강조가 국사학을 강화하여 민족주체성을 고양하는 학문적 민족주의에서 마련된다. 국사학이 식민사관의 극복에 주안을 두면서 폭넓은 역사의 원동력을 추구한 것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민족주체성을 강조하는 복고주의와 국수주의의 사관을 확대 재해석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학문적 쇼비니즘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국사학에서 모색하는 민중사관과 사회구성론의 추구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노력은 서양사에서 추구하는 사회사 연구와 긴밀한 학문적 교섭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한 시대의 역사 연구자들의 지적 자세 내지는 역사의식이 결정(結晶)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문화를 확인하기 위한 ‘타자를 통한 자기인식’이라는 인식 차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는 시각을 강조함과 동시에 구체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 한국사를 놓고 생각함으로써 양자의 협력가능성은 확대될 것이다.

사회사가 '일찌기 정치를 제외한 인민(민중)의 역사'라고 풀이된 이후 오늘날 서유럽의 사회사는 국가의 기능보다 사회의 기능을 강조하는 추세에 놓여 있다. 사회적 구조와 과정을 파악하면서 역사를 해석하려는 경향은 오늘날의 역사가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역사의 시각 내지는 역사의식이라 할 것이다.

IV. 역사교육에 반영된 역사의식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사관에서 이탈하여 참다운 민족사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고뇌에 찬 역사연구의 노력,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사가들의 역사의식은 짊은세대에 어떻게 반영된 것인가?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역사 교육의 문제와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연구의 성과가 2세를 교육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역사가 가르쳐진 결과로서 피교육자의 역사의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치문화의 풍토에서는 관이 주도한 교육의 일방적 통합기능으로 그것의 적·부적 합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거의 봉쇄되었고 교육의 역할이란 이때까지 다만 주어진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그것을 기능적으로 전수하는 일에만 시종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교육기능 자체의 심각한 문제가 내포된다고 할 수 있다.

광복후 우리의 교육제도는 식민지 통치를 위한 식민지 교육제도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채 미국식 교육제도와 교육이념이 중첩되어 출발되었다. 50년대 이후 교육학자만이 아니라 역사교육 관계자들도 미국으로부터 행태주의와 실용주의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심리측정과 평가방법을 이용한 교육방법을 적용·실시하여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고유한 가치를 고려하는 길은 봉쇄되어 교육의 역사적, 문화적, 철학적 반성이 제기될 수 없었다(김인희, 1983:131). 그 결과 교육학의 학문적 의미가 도구 학문의 성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관에 의한 통합적 기능에 이 바지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발적으로 역사교육의 당위성이 강조되어 교과서 문제, 내용지도의 문제, 또한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관련 등에 관해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남도영, 1980:188). 뒤에 다시 검토할 일이기는 하나 우선 국사 교과서의 경우, 단일화에 의해서 또한 한권의 교과서가 聖典化되어 그 내용을 금과옥조로 삼아 역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로막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특히 입시제도와 관련되어 교과서 자귀 하나하나를 그대로 암기하도록 강요된 비교육적 풍토 속에서 역사교육이 실시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역사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되고 역사이해를 위해 다양한 역사적 감각을 훈련하도록 하여 역사의식의 순화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이 일찍부터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내용지도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용을 암기하는 사실위주의 역사교육을 극복하고 사실과 사실을 관련짓는 역사적 이해, 즉 역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역사교육이 모색되어야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향토사에서 출발하여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의 관련에서 역사가 교육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역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의 전문적 연구 결과를 흡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뿐 아니라 순수학문 종사자들도 교육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역사학을 일반국민과 접목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사교육에 대한 요청에 전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간헐적으로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연계성이 강조되어 교과서편찬에 대한 관심이 피력되었다(김용덕, 1969:488-489). 이러한 산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방후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은 투철한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과목으로 인식되어 이를테면 정치적 통합기능에 순응함으로써 역사 속에 전개된 갈등과 협동, 억압과 해방, 개인주의와 연대주의 등 다원주의에 기초를 둔 역사인식을 가로 막는 결과가 되었다.

그 결과 역사교육은 「참여교과」의 성격이 크게 후퇴하여 「국책교과」의 성격으로 일관되어 국사교육에서의 자기발견이나 세계사 교육에서 ‘타자를 통한 자기발견’이라는 인식과정이 소홀해지고 젊은 세대에게 자기와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의 4·19를 계기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역사교육도 「국책교과」라는 기능에서 이탈하여 「참여교과」라는

성격으로 전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 4·19이후에 나타난 역사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반성은 교육일반에 대한 비판, 즉, 1) 교육을 교육원래의 목적에 환원시키고자 하는 노력, 2) 교육주체로서의 학교 조직운영의 민주화, 3) 외국 교과과정 수용에 대한 비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우리의 실정에 맞고 고유한 문화전통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역사교육과정 편성 등에 모색되기에 이르렀다(김성근, 1961:1). 뿐만 아니라 정치의 도구화로 전락한 교육기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역사교육의 목표를 1) 단순히 국가의 요구—국가의식의 조성, 애국·애족심의 양양, 국가활동에 대해 공헌하는 태도—라는 일방적 목표를 지양하고, 2) 역사교육에서 교수되는 지식이란 단순한 사건나열이나 기억이 되어서는 안되고 역사적 감각(역사의식)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는 정치적 기능보다는 삶의 기능으로서 역사적 감각, 즉 ‘역사의식’이 강조되어, (1) 문제해결을 위해 역사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 (2) 사건을 발전적으로 관찰하는 태도, (3) 역사적 사실을 그 전체조건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등이 역사교육의 목표로 새로이 설정되었다(이원순, 1961:7).

독재적 지배에서 해방된 역사교육은 이상과 같이 정치적 기능에 봉사하는 교육기능에서 해방되어 그에게 달려진 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으나 역사학계 일반에서 전개된 주제중심적 논의가 즉각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식민사관의 극복, 통일적 차원의 역사학과 민족사관 등이 그대로 역사교육에 반영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려는 급격한 주제중심적 문제보다는 보다 신중한 당위성 내지는 이념형적 문제의식에 역사교육도 종속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교육이라는 특수한 기능 내지는 구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사학계에서 식민사관을 비판하면서 자아발견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역사교육은 국사와 세계사의 관계를 새로이 조명하려고 시도하고도 있다(이원순, 1961:10). 1) 세계사와 민족사는 양극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현대세계의 특성에서 비추어 볼 때 확실히 세계사적 입장은 중시되어야 한다. 3) 약동하는 세계, 미묘한 세계의 참모습을 직시함으로써만 세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세계인으로서의 나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4) 양식있는 세계인 내지는 국제인은 세계사의 교양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되었던 것이다.

‘또한, 세계인 내지는 국제인인 동시에 우리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요, 이 민족의 구성원이다. 이 국민, 이 민족으로 부과된 책무도 지니고 있다. 그 럼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이원순, 1961:7 이하).

이 문맥 속에는 세계인과 한국인의 조화로운 공존, 즉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인간성이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은 다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민족사적 입장만을 고집할진데 소아병적 국수주의에 몰입될 것이며, 세계사적 가치만을 중시하면 그 자신이 서 있는 현실세계를 망각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완의 형태로나마 역사교육을 「국체교과」에서 해방시켜 「참여교과」로 전환시키려는 개방적인 노력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강화된 관에 의한 「국적있는 교육」이라는 방침에 의해 크게 후퇴되지 않을 수 없었다(이원순, 1985:321). 여기서 피교육자 개개인의 판단위에 육성될 수 있는 역사의식의 성장은 가로막히고 다원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봉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곧 교과과정 제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미국식으로 ‘사회과’라는 통합과정 속에 국사와 세계사 과목이 통합·교수되었다. 그러나 70년대에 이르러 「국적있는 교육」의 강조와 더불어 국사교육의 강화조치에 의해서 1973년 2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과목이 통합사회과에서 분리되어 독립교과로 운영하게 되나 세계사는 자리 일반사회와 함께 ‘사회과’에 그대로 둑여 있었다.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국사’가 ‘국민윤리’와 함께 필수과목으로 사회과 교과과정에서 분리되어 독립교과가 되어 강조되었으나 국사교육이 강화되는 데 비해 세계사 교육은 상대적으로 후퇴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구조는 3차 교과과정(1981)에서도 별다른 변동이 초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의 추세와 발맞추어 대학 기초교양에서도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는 대신 광복이후 줄곧 기초교양의 중추과목이었던 ‘세계문화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나타났다(이원순, 1985:323). 자기 역사에 대한 지나친 긍지와 세계이해를 극도로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교과과정의 변혁은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60년대부터 진행된 외래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에 대한 비판과 자아발견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정신발굴 등의 일련의 과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초 유신체제로 말미암아 민족주의는 한편으로는 비판적 국사학계가 제시한 것과 같이 식민사관과 정체사관을 극복하면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기울여 민족 기반에서 찾는 노선과 다른 한편으로는 관에 의해서 주도된 ‘국적있는 교육’에 의한 국수주의 역사관이라는 두 개의 노선으로 분열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신체제와 더불어 추진된 산업화 과정으로 잡다한 사회문제가 방출되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방사회로의 발돋움보다는 전통문화를 미화하고 폐쇄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하려는 데 모든 정치적인 노력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교과과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그것을 토대로 교과서가 개발되어 역사교육은 관이 심의에 의한 일방적 지침으로 운영되었을 뿐이다.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역사의식은 어떠하였는가? 국사교과서는 일종·겸인 정으로 국가에 의해서 단일 교과서로 개발되고 세계사 교과서는 일정한 심의 기준에 입각한 5종이 채택되었다. 1956년부터 1980년까지의 국사교과서를 분석한 한 보고는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이순권, 1983 : 299).

1. 1956년에 개발된 교과서에 비해서 1980년의 교과서는 양적으로 팽창되어 학계의 연구업적을 반영하여 고대·중세보다 근대·현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나라의 근대화과정이나 식민지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이 크게 부각되었다.

2. 그러나 민족의 내부적 모순에서 비롯되는 민족의 저항의 역사는 뒤에 개발한 교과서에서는 두드러지게 과소 평가되어 체제옹호를 위한 역사교육이 강조되었다.

3. 전반적으로 국사교육이 정치사 중심으로 편성되어 정치에서 소외된 사회층의 역사참여, 즉 사회사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단일 교육과정, 단일 교육이념, 단일 교과서에 의해서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역사가 가르쳐진 결과로서 피교육자의 역사의식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의 연구에서 서울의 중산층 거주지역인 아파트 밀집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부분적인 조사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순권, 1983 : 275).

1. 시대적 모순(위기)에 대한 인식—뛰어난 지도자가 없다거나 외적이 지배하는 것보다 대다수의 폐지배층이 억압당한 상황을 위기로 간주한다 (63%).
2.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커다란 시대적 문제점—외체의 압력이나 북한의 침략보다는 내부적인 정치, 경제, 사회의 불평등의 심화에서 찾는다 (53.6%).
3. 우리나라의 속원인 분단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군사력의 증강이나 외국의 원조, 강력한 지도력보다는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한 민주주의의 심화에서 찾고 있다(55.6%).
4. 역사의 주체를 민중에서 찾고 있어 다른 사회층보다 상회한다(40.2%).
5. 우리나라의 자주성—완전한 자주성을 부정하고 어느 정도의 자주성만을 가진다고 보인(31.3%) 반면 중국의 영향으로 자주성이 없다고까지 대답하고 있다. 광복후의 자주성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답을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조사는 조사자와 질문하는 방법이 내포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어 그 요구에 대한 해답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폐쇄적 정치체제하에서의 자기이해가 부정적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가 암시하는 것은 관이 주도한 역사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자율적인 역사 이해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역사를 움직기는 기본적 원동력을 몇 사람의 정치적 지도에서 찾기보다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기반에서 찾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국적있는 교육」의 강조는 여러 모로 긍정적인 역사의식을 함양한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식민지 지배에 이어 해방후 혼란 속에서 자조와 자학이 없지 못해 강하였던 패배의식을 불식하고 자기 역사와 전통에 대한 긍지를 심어 준 것은 명백하다.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조사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5 : 180).

- 1) 역사·문화에 대한 긍지는 프랑스의 54.9%, 일본의 48.5%, 브라질의 29.6%보다 우리가 높아 6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미국의 68.8% 영국의 68.6%보다 낮으나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애국심은 영국·미국·일본의 순위보다 높아 81.5%로 표시된다.
- 3) 외국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비율은 완전히 외국에서 살고 싶다에서

일본의 41.8%, 미국의 57.8%, 스웨덴의 73.0(전체평균, 50.8)보다 낮아 29.3%를 차지한다.

4) 그러나 사회에 대한 불만은 다른 나라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그 이유를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다’든가 ‘환경보호에 사람들이 무관심하다’ 등에서 찾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불만을 서열·가문·배경만을 중요시한다는 답이 65.0%, 올바른 일이 안통한다가 60.0%, 빈부격차가 심하다가 50.6% 부지러함이 대접 못받는가 40.6%, 사회복지 시설이 잘 안되었다가 37.4%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다.

이리한 조사의 결과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에 대한 청소년의 긍지는 강하지만 우리 사회가 갖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불만은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V. 결 론

근대 국민국가의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근대 역사학이 발달되어 집단적 기억을 세로이 구성하고 정치적 통합을 위한 역사교육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었던 일반적 추세는 우리 국가발전 과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해답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가 형성 발전되는 과정에서 역사적 전통을 매개로 하여 전개되었던 정치적 통합기능은 전통적 요소를 극복하고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적인 역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의 결과, 사회의 잠재력이 방출됨과 동시에 정치의 일방적인 통합기능은 그 한계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새로운 역사의식의 좌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사에서 추구하는 민중의 개념, 서양사의 사회사분야에서 사회사의 기능으로 부각된 인민 내지는 민중, 역사교육에서 역사의 원동력으로 확인되는 민중, 오늘의 역사의식의 핵심적 부분은 바로 민중론의에 귀결된 듯이 보인다. 일찌기 민중이란 객관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투여된 개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중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것이 누구에 의해 투여되었거나 사회의 어떤 계층에 의해 그와의 일체성이 더욱 뚜

렷하게 들어났는가 등을 살펴는 일은 앞으로의 학문적 과제나 교육의 목표만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에서도 살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식민지지배에 대항하고 해방후 경직된 정치적 상황에 저항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민중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질서가 확립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가? 이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식이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강만길

1985 “일제시대의 반식민사학론”, 「한국민족운동사론」, 한길사.

김성근

1961 “교육의 혁신과 역사교육의 과제”, 「역사교육」 5집.

김영호

1969 “한국사 정체성론의 극복의 방향”, 「월간아세아」 3월호.

김용덕

1969 “1968년도 한국사학계 회고와 전망—국사 총설”, 「역사학보」 44집.

김용섭

1966 “일본·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사서술”, 「역사학보」 31집.

김인희

1983 “식민지 교육학은 극복되었나”, 「한국사회연구」 1.

김정배

1979 “신민족주의의 사학”, 「문학과 지성」 봄호.

김진균

1983 “한국사회학, 그 물역사성의 성격”, 「한국사회연구」 1.

남도영

1980 “한국사의 반성”, 「역사교육」 28집, (한국사교육의 문제—역사교육 심포지움, 1980).

성유보

1983 “4월 혁명과 통일논의”, 「한국민족주의론 Ⅱ」, 창작과 비평사.

이광주, 이번호 편

1979 「역사와 사회과학」, 한길사.

이기배

1972 “신민족주의의 사관론”, 「문학과 지성」 가을호.

1975 “일제시대 한국사관의 극복—일제시대의 사회경제사학과 실증사학”, 「문학과 지성」 봄호.

이민호

1970 “역사의 주체의식”, 「역사교육」 13집. (역사교육의 문제점—역사교육 심포지

- 음, 1969).
- 1975 “광복 30년 서양사학의 반성과 방향”, 「역사학보」 68집.
 - 1976 “역사주의의 사회적 기능”, 「현대사학의 과제」, 탐구당.
 - 1982 “민족주의의 사회적 기능”, 「현대사회와 역사이론」.
- 이순권
- 1983 “역사교육과 민족주의”, 「한국민족주의론 Ⅱ」, 한길사.
- 이용법
- 1669 “한국사의 타율성 비판”.
- 이원순
- 1961 “역사교육의 신전환을 위하여”, 「역사교육」 5집.
 - 1985 “한국역사교육의 회고와 전망”, 「역사교육」 37-38합집. (한국역사교육의 전망—역사교육회 창립 30주년기념 심포지움, 1985).
- 정창렬
- 1982 “백성의식, 평민의식, 민중의식”, 「역사와 인간」.
- 차하순
- 1972 “현대역사철학과 한국사”, 「지성」.
- 홍이섭
- 1967 “식민지적 사관의 극복”, 「월간아세아」 3월.
- 『사학연구』편집부
- 1963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사회적 변동”, 「사학연구」 16집, (제 2회 토론회보)
- 『역사학보』편집부
- 1969 “서양사, 회고와 전망”, 「역사학보」.
- 『진단학보』편집부
- “한국근대화문제(I)－제 1회 동양학 심포지움 속기록”, 「진단학보」 23집.
- 『한국사회연구』편집부
- 1983 “한국사학, 오늘의 방향”, 「한국사회연구」 1. (좌담).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1985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한국인의 여론」 7집.
- Jeismann, K.-E.
- Geschichtsbewusstsein, in: Handbuch der Geschichtsdidaktik Bd. 1, hrsg.
 - Von K. Bergmann u.a.
- Rüsen, J.
- 1975 Werturteilsstreit und Erkenntnisfortschritt, in: H.M. Baumgartner u.a. (Hrsg.) Historische Objektivität.